

행정학 총평

COMPASS 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험은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변형, 신유형의 문제가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써 실력 있는 수험생과 이해 및 암기가 부족한 수험생을 구분 할 수 있었던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평가됩니다.

이 중 80%는 기출문제이거나 기출변형 문제였으며, 20%는 최근 행정학에서 관심 있게 조명되어온 이슈(정부 3.0)와 조금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정책학습, 탈신공공관리 등)로 출제되어 기출문제와 신유형 문제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신유형의 20% 문제에 있어 COMPASS 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수업시간 및 기본서에서 충분히 강조하였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D책형 기준으로 9번 '정책학습'은 COMPASS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1번 문제 '신공공관리론' 역시 COMPASS 행정학에서 탈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7번 '정부 3.0', 13번 '불확실성의 문제' 등은 수업시간에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 공무원 시험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합격하여 노랑진을 떠나 공직의 길을 걷게 되는 수험생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올 한해 결실을 맺지 못한 수험생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한 드림.

출제유형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3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2
조직론	3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행정론	2

0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부 부문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 ③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換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해설 ④ [×] 신공공관리론이 아닌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를 지향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159, 160

〈신공공관리(NPM) vs 탈신공공관리(Post-NPM)〉

1. 탈신공공관리의 의의 : 신공공관리론 등장 이후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많은 효과를 창출하였으나, 비판 역시 제기됨.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 기초해 신공공관리의 개혁의 한계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탈신공공관리(post-NPM)으로 개념화함.

2. 특징

①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

3. 신공공관리 vs 탈신공공관리

	비교국면	신공공관리	탈신공공관리
정부 기능	정부-시장 관계의 기본 철학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적 역량 강화 - 재규제의 주장 -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행정가치 치 동시 고려
	정부 규모와 기능	정부 규모와 기능의 감축 - 민간화·민영화·민간위탁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 민간부문을 공공서비스 제공의 공동생산자 및 경쟁자로 규정 - 내부시장화·계약·외주화	민간-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조
조직 구조	기본 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조직구조의 특징	비행구적·유기적 구조 - 임시조직·네트워크 활용 - 비계층적 구조 - 구조적 권한 이양과 분권화	재집권화 -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 책임운영기관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관리 기법	조직관리의 기본 철학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관리기법 도입 - 경쟁의 원리 도입 - 규정과 규제의 완화 - 관리자의 자율성·책임성 강조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통제 메커니즘	결과·산출 중심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리 - 능력·성과 기반 인사관리 - 경쟁적 인센티브 중시 - 개방형 인사제도	공공책임성 중시

▶ ④

0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 ③ 계급제에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용이하다.
- ④ 계급제에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② [×] 직위분류제가 아닌 계급제의 특성에 해당한다. 계급제는 일반행정이 중시로 계급만 동일하면 보수의 변동 없이 전직과 전보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직위분류제는 폭넓은 인사이동이 곤란하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66

▶ ②

03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② 계획과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과정이다.
- ③ TQM의 관심은 내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④ 산출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정통제계획과 같은 계량화된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해설 ① [○]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조직 내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수행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리방식이다. 품질관리가 조직 매 모든 사람의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② [○] TQM의 계획과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총체적 적용과 집단적 과정이다.

③ [×] TQM의 관심은 외부적이므로 고개에 의한 목표설정 및 평가를 강조한다. 반면 MBO의 경우 내부적이므로 상하급자 간 합의로 목표를 설정한다.

④ [○] TQM은 사실자료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 품질관리 기법을 적용하며, 계량화된 통제 수단을 활용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21, 422

▶ ③

04 월슨(J. 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이익집단정치라 한다.
- ㄴ. 기업가적 정치는 환경오염규제 사례처럼 오염업체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산된다.
- ㄷ. 대중정치는 한·약분쟁의 경우처럼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상황이다.
- ㄹ.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정치의 상황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 해설** ㄱ [○]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이익집단정치라고 한다.
 ㄴ [○]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비용이 좁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규제의 편익은 넓게 분산되어 있다. 환경오염규제와 퇴폐업소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ㄷ [×] 한·약분쟁은 이익집단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익집단 정치는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확보를 위해 참여하게 대립하는 정치상황이다.
 ㄹ [○]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환경규제가 시행된 것과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환경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편익과 비용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 환경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오염업체에게는 편익이 좁게 집중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고객정치적 상황이 발생한다.

〈월슨의 규제정치모형〉

구 분		규제의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규제 비용	넓게 분산	• 대중정치(다수결정치) : 편익과 비용 모두 분산 • 수혜자·비용부담자 모두 집단행동될 레마 발생 -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등	• 고객정치 : 편익 집중, 비용 분산 • 수혜자 집단에 의한 포획 시도, 쉽게 추진, 주로 경제적 규제와 연관 - 수입규제, 직업면허 등
	좁게 집중	• 기업가 정치 : 편익 분산, 비용 집중 • 비용부담집단(피규제집단)에 의한 포획 시도, 느슨한 정책집행이 발생, 주로 사회적 규제와 연관 - 환경오염규제, 퇴폐업소단속 등	• 이익집단정치 : 편익 집중, 비용 집중 • 서로의 이익 확보를 위한 집단 간 대립 - 한약분쟁, 의약분업규제 등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7



05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세 이상의 주민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 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③, ④ [○]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819, 820



06 영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계산전략의 한계 | ㄴ. 정보획득의 애로 |
| ㄷ. 예산통제의 애로 | ㄹ. 경직성 경비로 인한 한계 |
| ㄱ. 재정구조의 경직화 | ㅂ. 비경제적 요인의 간과 |

- ① ㄱ, ㄴ, ㄹ, ㅂ ② ㄱ, ㄷ, ㄹ,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ㄴ, ㄷ, ㄹ, ㅂ

해설 ㄱ, ㄴ, ㄹ, ㅂ [○]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지출제안서에 대해 매년 '0'의 기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검토하므로 방대한 자료가 요구되며, 우선순위를 계산함에 있어 많은 시간 등이 소요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직성 업무와 경비 법령상 제약으로 사업축소 및 폐지가 어렵고, ZBB가 합리모형이므로 근본적으로 비경제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ㄷ [×] 영기준 예산제도는 정부팽창에 대한 반발과 예산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다.

ㅂ [×] 영기준 예산제도는 사업 가치가 낮은 사업을 축소, 폐지 시킬 수 있으므로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672

▶ ①

07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의 과제 중에서 공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과제는?

-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만관 협치 강화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해설 정부 3.0은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운동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정부, 지방, 국민의 역량을 한 방향으로 모아 국정과제 해결 및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정부이다.

②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는 민간에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 정보 개방을 통해 버스정류장의 버스 도착 시간을 미리 민간버스 업체가 안내해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711

▶ ②

08 예산상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① 관계의 규칙성
 ②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③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④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해설 예산상의 점증주의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바꿔말하면 현실에서 합리모형의 한계(합리적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와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다.

- ① [○] 합리주의의 한계 : 예산결정의 합리주의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중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예산결정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시간, 결정비용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예산결정자들은 관계의 규칙성, 개략적 추정, 만족수준의 해결방안 탐색에 의존한다.
- ②, ④ [○] 정치적 필요 : 점증주의적 의사결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방법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중추들에 의해 결정되고 각자 자기 몫을 챙길 수 있게 하므로 참여세력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안정시키며 편의를 발생시킨다.
- ③ [×] 예산통일의 원칙이란 전통적 예산원칙으로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즉, 통일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국고에 모두 납입하여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예측가능성이 높아 점증주의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만큼 특정 세입과 세출을 연계할 수 있으므로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점증주의적 상황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45, 246, 614

▶ ③

0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행착오나 정책실패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② 수단적 정책학습은 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가능성을 의미한다.
- ③ 사회적 정책학습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정책문제에 내재된 인과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 ④ 정치적 학습은 단순한 프로그램 관리의 조정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목적들과 정부 행동들의 성격과 적합성까지 포함한다.

해설 ① [○] 정책학습은 정책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과 응용과정으로 정책실패나 시행착오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다.

② [○] 수단적 학습은 집행수단이나 관리기법에 대한 학습으로 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인다.

③ [○] 사회적 학습은 정책 또는 사회적 구성에 관한 학습으로 관리기법 뿐만 아니라 사업목표에 대한 태도, 정부활동의 타당성까지도 검토하게 된다. 이는 정책문제에 내재하는 인과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④ [×] 사회적 정책학습에 대한 설명이다. 정치적 학습은 수단적 학습이나 사회적 학습과는 달리 주어진 정책적 사고나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주장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정책학습〉

수단적 학습	- 집행수단이나 관리기법에 대한 학습 - 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임.
사회적 학습	- 정책 또는 사회적 구성에 관한 학습. 관리기법뿐 아니라 사업목표에 대한 태도, 정부활동의 타당성까지도 검토하게 됨. - 정책문제에 내재하는 인과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정치적 학습	- 주어진 정책적 사고나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주장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학습 - 정치적 변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전략과 전술을 변화시킬 때 발생함.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79

▶ ④

10 소방공무원의 선발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방법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 ㉡책형을 중앙소방학교 교육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② 내용타당성 -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발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
- ③ 기준타당성 - 소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④ 구성타당성 - 지원자의 근력·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시험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해설 ① [○]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동질이형법에 대한 설명이다. 동질이형법은 문제수준이 비슷한 동질의 시험유형을 개발하여 동일 대상에게 시험을 보게 한 후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③ [×] 기준타당성이 아닌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신뢰도의 측정방법 중 재시험법에 대한 설명이다. 재시험법이란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대상집단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하여 그 성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81

▶ ③

11 공무원 경력개발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적재적소의 원칙
- ② 직급중심의 원칙
- ③ 인재양성의 원칙
- ④ 자기주도의 원칙

해설 ①, ③, ④ [○], ② [×] 공무원 경력개발 시 직급이 아닌 직무 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요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직무와 역량 중심 원칙).
(경력개발의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	구성원의 적성, 지식, 경험, 능력과 조직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직무가 잘 조화되도록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원칙
승진경로의 원칙	조직의 모든 직위를 수 개의 전문 분야와 공통 분야로 구분하고, 특정 공무원의 경력, 전공,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인재양성의 원칙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구성원의 경력개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
직무와 역량 중심 원칙	직급이 아닌 직무 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요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
개방성 및 공정경쟁 원칙	경력개발의 기회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보직 이동의 기회도 역량을 갖춘 직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자기 주도의 원칙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통하여 경력목표와 경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원칙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490

▶ ②

12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③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④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

해설 ①, ②, ③ [○]

④ [×]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 등의 통제 효율성과 같이 공급자 중심의 원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정부법 상 운영원칙〉

개정 전	개정 후
1. 국민편익증진의 원칙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전자적 처리의 원칙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행정정보공개 원칙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7.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7.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운영
8. 중복투자방지의 원칙	8.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의 민원인에 제출 요구 금지
9.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9.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사용금지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710

▶ ④

13 행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와 지식의 수집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 ② 작업과정에서 행정의 표준화를 통해 개인의 자의적 행위를 예방하여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③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가외성(redundancy)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다.
- ④ 행정 조직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설 ① [×] 불확실성 하에서는 즉시적 결과예측보다는 가능한 시간을 늦추어 정보를 많이 얻고, 시간을 벌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② [○]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극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론과 모형을 개발하거나 표준화를 통한 방법은 보다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에 해당한다.

③ [○] 대안의 결과가 불확실 할 때, 대안의 추진을 위한 중복적, 가외성(중복성, redundancy)을 보유하도록 한다.

④ [○] 불확실한 환경하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발생가능한 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결과변화를 추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40

▶ ①

14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기관은 위임·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 ② 보좌기관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 ③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④ 보좌기관은 목표달성 및 정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 해설** ① [○] 보조기관(계선, line)은 구체적 결정권, 집행권을 행사하며, 그 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이 수반된다.
- ② [○] 보좌기관(참모, staff)은 보조기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보조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업무에 책임이 수반되는 보조기관에서 나타난다.
- ④ [○] 보좌기관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목표달성 및 정책수행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지원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368

▶ ③

15 행정윤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윤리나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 ②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받게 된다.
- ③ OECD는 정부의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행정윤리는 특정 시점이나 사실과 관계없이 규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작동되어야 한다.

- 해설** ④ [×] 공직윤리,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신분상 준수해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기준이다. 과거에는 의무론적인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산출과 성과를 지향하는 결정론적 관점도 강조되고 있다. 즉, 이는 행정윤리가 규범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행정윤리의 확보의 방법이나 바람직한 가치판단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533, 534

▶ ④

16 정책집행과 그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과모형이 필요하다.
- ㉡. 프레스만(J.Pressman)과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정책집행연구의 초기 학자들로서 집행을 정책결과와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을 정의한다.
- ㉢. 정책 대상 집단 중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 ㉣. 립스키(M.Lipsky)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ㅋ
③ ㄴ, ㄷ, ㅋ ④ ㄱ, ㄴ, ㄷ, ㅋ

해설 ㄱ [O]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야기한 원인과 그 원인의 제거를 위한 수단을 설명하는 적절한 인과모형이 필요하다.

↳ [O] 현대적 정책집행론의 1세대인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고전적 정책집행론이 정책결정과 집행을 이질적인 것으로 본 것에 반해 정책결정과 집행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ㄷ [○] 정책 대상 집단 중 수혜집단의 규모 및 조직화의 정도가 클수록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ㄹ [O]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은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업무환경에서의 일선공무원의 집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64, 267, 278



17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도 이용된다.
- ②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 ③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NPV)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해설 ④ [X] 내부수익률은 편의의 총현재가치와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B/C Ratio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비용편익분석〉 : 사업경제성이 있을 조건

순현재가치(NPV)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것, 클수록 좋은 대안
편익비용비(B/C Ratio)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클 것, 클수록 좋은 대안
내부수익률	기준할인율보다 클 것, 클수록 좋은 대안
자본회수기간	자본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
할인율	낮은 할인율은 장기투자, 높은 할인율은 단기투자에 유리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234



상황 요인	특성	리더십에 관한 영향	
		도구적(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부하	부하의 전문지식, 능력, 훈련	대체물	—
	부하의 전문적 지향	대체물	대체물
과업	구조화 및 일상적 과업	대체물	—
	직무자체에서 오는 만족	—	대체물
조직	작업집단 응집성	대체물	대체물
	조직의 공식화	대체물	—
	조직적 보상에 대한 무관심	중화물	중화물
	낮은 리더의 지위권력	중화물	중화물
	리더-부하 간의 공간거리확대	중화물	중화물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399

▶ ②

20 「국가재정법」 제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② 재정의 투명성이란 재정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제반 사항 및 경과를 일반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재정 건전성은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운영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운용을 의미한다.
- ④ 성과지향성이란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정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평가·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에도 적용된다.

해설 ① [×] 국가재정법의 기본 내용에는 개정운용의 효율성 및 성과지향성 제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의 제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2015 compass 행정학 p.582, 583

▶ ①